

공직부패 방지를 위한 경찰공무원 징계부가금 제도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Disciplinary Additional Charges for Police Officials To Prevent Public Corruption

김 영 식(Kim, Young Sik)*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operation condition of the disciplinary additional charge system and to derive its problems. To this end, a theoretical review of this system and an empirical analysis of the decisions made by Appeals Commission are conducted to derive problems and present alternatives from a legal and policy-level perspective to prevent public corruption.

Whether the reason for disciplinary action is subject to criminal punishment has a significant impact on decisions when the disciplinary committee decides to impose disciplinary additional charges and when the Appeals Commission examines and makes decisions on appeals. It is at the discretion of the chief of the agency to determine whether to file disciplinary action or accusations of duty based on the degree of misconduct, so detailed guidelines for accusation of duty are needed for each administrative agencies based on the general guidelines of the Prime Minister's order.

In terms of system operation, to resolve the issue of equity and inconsistencies in system operation, the disciplinary authority should not demand specific level of multiples for those who are subject to disciplinary additional charges, but just demand the disciplinary committee decides to impose disciplinary additional charges. Then, in consideration of the degree of misconduct, intention and negligence, the Disciplinary Committee determines the specific level of multiples for the disciplinary additional charges and examines the reasons for adjustment and reduction, and finally decides on the total amount.

In addition, considering the purpose of the introduction of the disciplinary additional charges system and the effect of the punishment, it is necessary to exclude disciplinary additional charges if the police officials are subject to criminal punishment or disciplinary action of exclusion with the restriction of retirement benefits and severance allowances.

Key words: disciplinary additional charges, police officers, accusations of duty, bribery, public corruption

* 서원대학교 경찰학부 부교수, 행정학박사

I. 서론

2015년 소위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청탁금지법’이 우여곡절 끝에 제정되어 2016년 9월 28일부터 시행되고 있다.¹⁾ 부정청탁과 금품·향응 등 수수행위는 직무집행의 공정과 이에 대한 사회의 신뢰를 저해하여 사회일반으로부터 직무집행의 공정성을 의심받게 할 뿐만 아니라 민주주의 사회에서 공무원들의 직무행위의 불가매수성이라는 보호법익을 침해하는 중대한 의무위반행위이다.²⁾

오늘날 공직의 구조 및 공직에 대한 인식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은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지위를 지니는 것이고 공정한 공직수행을 위한 직무상의 높은 수준의 엄결성은 여전히 강조되고 있다.³⁾ 또한, 산업 및 사회구조의 변화로 공직에 대한 선호도 증가, 공무원들에 대한 신분보장과 직무환경의 개선, 후생복지 혜택 등 공무원이라는 직업은 이미 우리 사회에서 전망의 대상이 되었다. 이런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국민들의 공직자에 대한 청렴성과 공정성, 성실성, 전문성에 대한 눈높이는 높아 졌고, 일부 공직자의 일탈행위는 전체 공직에 대한 불신을 초래할 수 있다. 특히, 특정직 경찰공무원의 이러한 비위 행위는 직무의 특성상 사회적 파장이 매우 크다.

2010년 우리 정부는 공직사회에서 발생하고 있는 교육비리, 토착비리, 사회복지예산 횡령 등 공직 비리가 근절되지 않고 계속되고 있는 것과 관련하여, 공직비리를 근원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특단의 조치로 징계부가금 제도를 도입하였다. 공직사회의 투명성을 기대하며 도입한 새로운 제도가 시행 된지 어느덧 10년이 지났다. 그러나 ‘청탁금지법’, ‘징계부가금’ 그리고 각종 통제장치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공직자들의 청렴의무 위반 행위는 끊이질 않고 있다. ‘징계부가금’ 제도가 시행되면서 경찰공무원의 금품비리 행위에 대해 형식적으로는 과도하리만큼 백화점식 처벌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소위 “공직부패(公職腐敗), 패가망신(敗家亡身)”이라는 방정식은 통하지 않는 듯하다.

한편, 금품비리로 징계처분을 받는 공무원 입장에서는 징계부가금이 과도한 제재라고 생각할 수 있다. 징계사유인 비위 행위로 형사처벌을 받게 되면 신체형과 재산형을 병과 받을 수 있고, 행정상 징계처분을 받으면서 동시에 징계부가금 부과 처분을 받기 때문이다. 그리고 금품·향응수수, 공금횡령·유용 등으로 파면, 해임의 배제징계 처분을 받게 되면 퇴직급여와 퇴직수당이 감액되기도 한다.⁴⁾ 대상자 입장에서는 공무원이라는 이유로 일반인과 달리 4중, 5중의 제재

1)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법률 제13278호, 2015. 3. 27., 제정)

2) 대법원 2000. 1. 21. 선고 99도4940

3) 헌법재판소 2004. 9. 23. 2004헌가12

4)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61조에 의하여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을 감액하여 지급함

1. 징계에 의하여 파면된 경우

가. 재직기간이 5년 미만인 사람의 퇴직급여: 4분의 1

나. 재직기간이 5년 이상인 사람의 퇴직급여: 2분의 1

를 받는다고 억울해 할 수도 있다. 이러한 과잉처벌 문제를 우려하여 입법자들은 개별 비위 행위의 위법 정도에 비례하는 상당한 금액의 범위 내에서만 징계부가금을 의결하도록 하고 있고, 징계부가금 부과결 전·후에 형사처벌을 받거나 변상책임 등을 이행한 경우에는 필요적으로 징계부가금을 조정·감면하도록 하고 있다.⁵⁾ 이때, 벌금, 변상금, 몰수, 추징금, 환수금 또는 가산징수금에 해당하는 금액과 징계부가금의 합계액이 대상금액의 5배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⁶⁾

헌법재판소도 징계부가금관련 위헌심판에서 이 제도가 공무원의 금품 관련 비리를 근절·예방하고 공직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것이므로, 입법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적합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하고 있다. 그리고 징계부가금 부과 과정에서 필요적 조정·감면의 절차를 규정하고 있어 침해의 최소성의 원칙과 법익 균형성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⁷⁾

이런 배경 하에 본 연구에서는 2010년부터 도입되어 시행되고 있는 ‘징계부가금’ 제도에 대한 운영 실태를 분석하고 문제점을 도출하여 개선방안을 제안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징계부가금’에 관하여 일부 행정법학자들이 법적 성격 관점에서 연구를 하였고, 제도 운영에 대한 평가나 구조적 문제점에 대한 실증연구는 전무하다.⁸⁾ 본 연구에서는 징계부가금에 관한 관련 문헌연구를 통해 이론적 검토를 하고 소청심사위원회에 청구된 징계부가금 소청 청구 사례 97건(경찰공무원 42건 포함)을 심층 분석하여 문제점을 도출하고, 입법·정책적 개선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Ⅱ. 이론적 배경

1. 징계부가금의 법적 성격

경찰공무원의 징계는 중징계와 경징계로 구분하고, 그 유형은 파면, 해임, 강등, 정직, 감

-
- 다. 퇴직수당: 2분의 1
 2. 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의 횡령·유용으로 징계에 의하여 해임된 경우
 가. 재직기간이 5년 미만인 사람의 퇴직급여: 8분의 1
 나. 재직기간이 5년 이상인 사람의 퇴직급여: 4분의 1
 다. 퇴직수당: 4분의 1
 5)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 제2항 및 제3항
 6) 「공무원 징계령」 제17조의2 제3항
 7) 헌재 2012헌바435, 2015. 2. 26
 8) KCI 연구논문 중 “징계부가금”으로 검색한 바, 총 4건의 논문을 찾을 수 있음; 장호진(2017), “지방공기업법상의 징계부가금 및 징계시효 제도에 관한 고찰”, 법학논총 34권 1호, 김지영(2017), “행정법상 부가금에 관한 고찰: 징계부가금과 제재부가금을 중심으로”, 법과정책연구 17권 3호, 최정운·김형섭(2021), “공무원의 행정법상 책임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 법과정책연구 21권 1호, 최정운(2018), “공무원의 재정상 행위와 그 의무위반에 관한 공법적 소고”, 한양법학 29권 1호

봉, 견책으로 나뉜다(경찰공무원 징계령 제2조). 행정안전부는 징계부가금 제도를 신설하면서 그 법적 성격에 대하여 ‘공무원의 의무위반에 대하여 공무원관계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사용자로서의 지위에서 징계와 함께 부과하는 금전적 제재’이면서, ‘징계와 유사한 행정처분으로 징계벌’에 해당한다고 설명하였다.⁹⁾ 즉, 징계부가금은 금전적 제재의 형태를 갖는 징계벌의 한 유형으로 행정조직 내부에서 공무원의 특별행정법관계에 의해 부과되는 징벌이다. 따라서 행정법규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행정법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행정의 상대방에게 가해지는 제재인 행정벌이나 국가 일반통치권에 의하여 형법상 위반행위에 대하여 가해지는 형벌과 구별된다(김유환, 2016: 561).

징계부가금은 징계와 함께 부과하는 금전적 제재로서 “행정작용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행정제재의 수단으로서 부과되는 금전지급의무제도”인 행정제재금의 하나라고 볼 수 있다(오준근, 1999: 412). 김지영(2017: 407)은 행정법상 부가금에 관한 연구에서 징계부가금을 ‘행정제재금’으로 보고 있으며, 새로운 유형의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이라기 보다는 ‘과태료’와 ‘과징금’적 성격을 내포하는 양면적 성격으로 설명하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지방공무원법 제69조의2(징계부가금)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에서 “징계부가금은 공무원의 업무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공금의 횡령이라는 공무원의 의무 위반 행위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사용자로서의 지위에서 행정 절차를 통해 부과하는 행정적 제재”라고 정의 하였다.¹⁰⁾ 또한, 인사혁신처는 징계부가금을 “공무원의 의무 위반에 대하여 공무원관계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국가가 사용자로서의 지위에서 징계와 함께 부과하는 금전적 제재”이고, 이것은 징계와 유사한 행정처분으로써 징계벌에 해당한다고 설명하고 있다(인사혁신처, 2018: 56).

결론적으로 징계부가금은 금전적 제재의 형태를 갖는 징계벌의 한 유형으로 경찰공무원의 특별권력관계에 의해 일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할 때 부과되는 징벌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따라서 징계부가금 부과 대상 사유에 해당하는 비위행위에 대해서 경찰공무원에게 중징계나 경징계에 해당하는 징계 유형의 처분이 의결되고, 동시에 징계부가금 부과가 의결되는 경우 이들 모두 징계처분에 해당한다.

징계부가금 제도는 형사처벌되지 않고 주로 경징계에 그치게 되어 부당이득을 환수할 수 없었던 소액 횡령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직무와 관련하여 고발되지 않은 금품비리 행위에 대해 재산상의 제재를 가할 필요에 의해 신설되었다.¹¹⁾ 2010년 징계부가금 제도를 시행하면서 행정안전부는 종래 금품 수수 및 공금 횡령·유용 비리에 대하여, 형사고발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거나, 고발이 되더라도 기소되는 비율이 매우 낮아 기존의 징계처분만으로는 재산적 제재를 가할 수 없는 한계가 있어 징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새로운 제도를 도

9) 법제사법위원회,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검토보고, 4면

10) 헌재 2012헌바435, 2015. 2. 26

11)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50415(징계부가금 3배 부과 처분 취소 또는 감경 청구)

입한다고 설명하였다.¹²⁾ 헌법재판소와 소청심사위원회도 징계부가금 제도의 도입 취지에 대해 일정한 징계 사유에 해당할 경우 징계 의결 요구와 함께 부과되는 경제적 처벌로서의 기능과 대상자가 취득한 불법적 이익을 환수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밝히고 있다.¹³⁾

결론적으로 징계부가금은 경찰공무원 징계 유형에는 포함되지 않지만 징계처분의 성격을 갖는 금전적 제재로서 징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처벌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대상자가 얻은 부당이득을 환수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 경찰공무원 징계부가금 부과 절차

경찰청은 총경 및 경정에 대한 징계부가금 부과 사건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중앙징계위원회를 설치·운영하고, 경찰청, 지방경찰청 및 각 경찰서는 소속 경감 이하 경찰공무원에 대한 징계부가금 부과 사건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보통징계위원회를 설치·운영하고 있다(『경찰공무원 징계령』 제3조 및 제4조).¹⁴⁾ 징계권자는 경찰공무원의 징계 사유가 법령에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할 때 관할 징계위원회에 징계 의결 요구와 동시에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을 요구해야 한다(『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 제1항).¹⁵⁾ 법령에서 정하는 징계부가금 부과 대상 징계 사유는 아래 <표 1>과 같다.

<표 1> 징계부가금 부과 대상 징계 사유

근거규정	행위유형	세부내용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제1항 제1호	금전, 물품, 부동산, 향응 또는 그 밖에 법령에서 정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공한 경우	유가증권, 숙박권, 회원권, 입장권, 할인권, 초대권, 관람권, 부동산 등의 사용권 등 일체의 재산상 이익 골프 등의 접대 또는 교통숙박 등의 편의 제공 채무면제, 취업제공, 이권(利權)부여 등 유형무형의 경제적 이익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제1항 제2호	법령에서 정하는 예산, 기금, 국고금, 보조금, 국유재산, 공유재산, 물품 등을 횡령(橫領), 배임(背任), 절도, 사기 또는 유용(流用)한 경우	「국가재정법」에 따른 예산 및 기금 「지방재정법」에 따른 예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른 기금 「국고금 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국고금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보조금 「국유재산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국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물품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공유재산 및 물품

12) 제도 도입 당시 횡령시 비고발 비율이 58.3%이고, 2006년~2008년간 중앙징계위원회에서 의결된 300만원 이하 금품비리 총 41건 중 한 건만이 형사처벌(선고유예)되었음(행정안전부, 2010년 3월 18일 보도자료)

13)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50453, 20150593, 20180189 등; 헌재 2012헌바435, 2015. 2. 26.

14) 경무관 이상의 경찰공무원에 대한 징계 및 징계부가금 사건의 심의·의결은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치된 징계위원회에서 한다(『경찰공무원법』 제32조 제1항 및 「공무원 징계령」 제2조 제2항).

15) 징계부가금 의결 요구는 정수인 배수를 정하여 요구한다.

징계위원회는 징계부가금 부과결정이 요구된 사건에서 혐의자의 비위(非違)의 유형, 비위의 정도 및 과실의 경중과 혐의 당시 직급, 비위행위가 공직 내외에 미치는 영향, 수사 중 공무원 신분을 감추거나 속인 정황, 평소 행실, 공적(功績), 뉘우치는 정도, 규제개혁 및 국정과제 등 관련 업무 처리의 적극성 또는 그 밖의 정상 등을 고려하여 징계부가금을 의결해야 한다(「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제2조 제1항). 이때 징계부가금의 부과는 해당 행위로 취득하거나 제공한 금전 또는 재산상 이득의 5배 이내에서 비위의 유형과 비위의 정도 및 과실 여부에 따라서 징계부가금의 부과 의결을 할 수 있다(「공무원 징계령」 제17조의2 제2항). 징계부가금의 부과 기준은 아래 <표 2>와 같다.

<표 2> 징계부가금 부과 기준

비위의 정도 및 과실 여부 비위의 유형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이거나,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경과실이거나,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경우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제1항제1호의 행위 ¹⁶⁾	금품비위금액등의 4 ~ 5배	금품비위금액등의 3 ~ 4배	금품비위금액등의 2 ~ 3배	금품비위금액등의 1 ~ 2배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제1항제2호의 행위	금품비위금액등의 3 ~ 5배	금품비위금액등의 2 ~ 3배	금품비위금액등의 2배	금품비위금액등의 1배

출처 :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별표 1의5]

징계위원회는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을 하기 전에 징계부가금 부과 대상자가 다른 법률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거나 변상책임 등을 이행한 경우(몰수나 추징을 당한 경우를 포함)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환수나 가산징수 절차에 따라 환수금이나 가산징수금을 납부한 경우에는 조정된 범위에서 징계부가금 부과를 의결하여야 한다(「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 제2항). 징계부가금을 조정하여 의결할 때에는 벌금, 변상금, 몰수, 추징금, 환수금 또는 가산징수금에 해당하는 금액과 징계부가금의 합계액이 대상금액의 5배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공무원 징계령」 제17조의2 제3항). 한편, 징계위원회는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을 한 후에 징계부가금 부과 대상자가 벌금 등을 납부한 경우에는 신청에 따라 이미 의결된 징계부가금의 감면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공무원 징계령」 제17조의2 제4항).

금품비리 행위에 대해서는 사안에 따라 형사처벌이 되는 경우 신체형과 함께 벌금, 몰수, 추징금이 병과 되기도 한다. 이 경우 징계와 함께 징계부가금이 부과되면 징계사유로 삼은 비행의 정도에 비하여 균형을 잃은 과중한 징계처분이 될 수도 있다. 판례도 경찰공무원에

16)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제1항제1호의 행위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8조제2항을 위반한 경우로서 그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에는 금품비위금액등의 2배의 징계부가금을 부과한다.

대한 징계처분이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행정목적, 징계 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에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 징계권자가 재량권을 남용한 위법한 징계처분이라고 판단하고 있다.¹⁷⁾ 재량권 남용에 의한 위법성 판단 기준으로 판례는 공익의 원칙, 비례의 원칙 또는 평등의 원칙을 제시하고 있고, 이를 위반하여 이루어진 징계처분은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이라고 한다.¹⁸⁾

따라서 징계위원회는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이 요구된 사안에서 개별 비위 행위의 위법 정도에 비례하는 상당한 금액의 범위에서 징계부가금이 부과되도록 해야 한다. 경찰공무원의 징계부가금 부과 처분에 대한 소청심사위원회의 판단 및 결정 내용을 보면 다수의 사건에서 형사처벌과 함께 재산형인 벌금, 몰수 및 추징을 선고 받은 경우 대상자가 비위의 정도나 책임에 상응한 징벌의 효과가 달성되었고, 재산형을 통해 취득한 불법적 이익의 환수나 경제적 처벌의 기능이 이미 달성되었다는 이유로 징계부가금 처분을 감면하고 있다.

Ⅲ. 경찰공무원 징계부가금 제도 운영 실태 및 문제점

1. 징계부가금에 대한 소청사례 현황 및 분석

최근 5년 간(2016년~2020년) 경찰공무원에 대한 징계부가금 부과 현황은 아래 <표 3>과 같다. 징계부가금 부과는 총 147명이고, 총 의결금액은 13억6천7백5십만원이다. 최종 3억6백3십만원이 조정되어 부과된 금액은 10억6천1백만원이다. 총 147명 중 미납인원은 3명이며, 정보공개 청구 당시 3명 모두 형사소송 및 소청 등을 진행하고 있어 실질적 미납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표 3> 최근 5년 간 경찰청 징계부가금 부과 현황

(단위 : 명/백만원)

연도별	부과 현황				납부 현황	
	부과인원	의결금액 (A)	조정금액 (B)	최종 부과금액 (A-B)	납부완료	미납부
2016년	49명	90.4	40.6	49.8	41명 (8명 면제)	-
2017년	40명	156	50	106	33명 (7명 면제)	-

17) 대법원 1999. 11. 26. 선고 98두6951

18) 대법원 1992. 9. 26. 선고 91누11308

2018년	22명	42.6	35.1	7.5	14명 (8명 면제)	-
2019년	21명	202.3	180	22.3	13명 (8명 면제)	-
2020년	15명	876.2	0.6	875.6	11명 (1명 면제)	3명

출처 : 경찰청 정보공개 청구 자료(2021-05-13 정보공개)

구체적인 징계사유와 최종 의결내용을 분석하기 위해서 2016년 1월 1일부터 2021년 6월 1일까지 소청심사위원회에 청구된 소청사건 중 비위유형 “금품수수(향응수수)”와 원처분 “징계부가금”으로 소청사례를 검색하였고, 총 97건의 소청사례를 조사하였다. 이 중에서 소청인이 경찰공무원(해양경찰 포함)인 경우는 총 42건으로 파악되었다. 원처분 징계부가금의 배수(1배~5배)별 소청사례 수는 아래 <표 4>와 같다.

<표 4> 금품수수(향응수수)에 대한 징계부가금 소청사례(배수별)

징계부가금 원처분	1배	2배	3배	4배	5배
사례 수 (비율%)	39 (40.2%)	37 (38.1%)	13 (13.4%)	6 (6.2%)	2 (2.1%)

조사대상 97건의 소청사례의 결정 유형별 분포는 아래 <표 5>와 같다. ‘기타’로 분류된 사항은 소청 결정문 내용을 들여다 보면 ‘감경’으로 분류할 수 있다.¹⁹⁾

<표 5> 금품수수(향응수수)에 대한 징계부가금 소청사례(결정 유형별)

결정유형	각하	기각	감경	취소	기타
사례 수 (비율%)	2 (2.1%)	58 (59.8%)	8 (8.2%)	27 (27.8%)	2 (2.1%)

금품·향응수수에 대한 징계부가금 부과는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 대상금액의 1배~2배를 부과한다. 소청을 통한 취소, 감경에 대한 내용을 분석하기 위해서 원처분을 3배 이상의 징계부가금으로 제한하여 추출하였고, 이들에 대한 결정유형과 사유를 소청 결정문 내용을 통해 심층 분석하였다. 97건의 사례 중 원처분이 징계부가금 3배 이상인 경우는 21건이다. 21건에 대한 결정 유형은 아래 <표 6>과 같다.

19) ‘기타’로 분류된 소청사례 두 건(사건번호 20170779, 20170143)은 각각 징계부가금 원처분 3배를 2배로, 4배를 1배로 감경하였음(‘감경’으로 분류할 경우 사례 수는 10건이고 비율은 10.3%임)

〈표 6〉 금품수수(향응수수)에 대한 징계부가금 3배 이상(원처분) 소청사례

결정유형	각하	기각	감경	취소	기타
사례 수 (비율%)	2 (9.5%)	7 (33.3%)	4 (19.1%)	6 (28.6%)	2 (9.5%)

‘기각’ 사례 7건의 소청결정문을 분석해 보면, ‘사건번호-20200493’은 원처분이 정직3월과 징계부가금 3배이고, 법원에서 해당 징계사유로 과태료 200만원을 선고하였다. ‘사건번호-20190599’은 징계부가금 5배에 대한 원처분에 대한 소청을 기각하였고 결정의 이유는 형사재판 1심이 진행 중으로 재산형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을 고려하였다. ‘사건번호-20190181’, ‘사건번호-20180646’, ‘사건번호-20150841’는 별도의 형사처벌을 받지 않아 불법적 이익의 환수나 경제적 처벌의 기능이 징계부가금이 유일한 사례들이다. 나머지 두 건(‘사건번호-20160728’, ‘사건번호-20150837’)은 금품향응 수수액이 소액이고 형사처벌을 받지 않아 징계부가금 이외에 금전적 제재가 없는 사례들이다. 분석결과를 정리하면 원처분이 징계부가금 3배 이상 의결한 것은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또는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이거나,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사안들로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라 징계부가금이 유일한 금전적 제재인 사례들이다.

‘취소’, ‘감경’(실질적 ‘감경’ 사례인 ‘기타’ 2건 포함) 소청사례는 12건으로 아래 <표 7>과 같다. ‘취소’ 사례 5건을 세부적으로 보면, 형사재판에서 무죄가 확정되었거나 원처분 징계사유의 사정변경이 있는 2건을 제외하고 나머지 3건은 배제징계(파면, 해임)와 형사처벌(벌금, 추징 포함), 자발적 금품 반환의 경우로서 이미 징벌의 효과가 달성되어 징계의 실효성이 이미 확보되었다고 판단하고, 징계부가금이 과도하게 부과되어 과잉처벌하지 않도록 감면규정을 둔 입법취지를 고려하여 원처분을 취소하였다. ‘감경’ 사례 7건은 배제징계(해임)로 징벌의 효과가 이미 달성되어 원처분 징계부가금 3배 이상을 1배~2배로 감경한 것이다.

결론적으로, 징계부가금 3배 이상 부과된 징계 사례들을 보면 대부분 경징계에 해당되고, 중징계에 해당하는 경우는 취소나 1배~2배로 감경되었다. 특히, 배제징계(파면·해임)와 형사처벌(벌금 및 추징) 대상이 된 경우 과잉처벌을 회피하기 위해 징계부가금을 취소하는 사례들을 볼 수 있다.

〈표 7〉 금품수수(향응수수)에 대한 징계부가금 소청사례 분석

연번	사건번호	원처분	결정유형	비고
1	20200566	징계부가금 3배	감경	강등, 1배로 감경
2	20180336	징계부가금 5배	취소	파면, 형사처벌(벌금 및 추징 포함)
3	20180187	징계부가금 3배	취소	파면→해임, 수수 금품 자발적 반환
4	20180155	징계부가금 4배	취소	파면, 형사처벌(벌금 및 추징 포함)

5	20180354	징계부가금 3배	감경	강등, 1배로 감경
6	20170779	징계부가금 3배	기타	해임, 형사기소로 처벌 예상, 2배로 감경
7	20160186	징계부가금 4배	감경	파면, 형사처벌(벌금 및 추징 포함), 1배로 감경
8	20170143	징계부가금 4배	기타	해임, 배제징계 연금 감액 고려, 1배로 감경
9	20170143	징계부가금 4배	감경	해임, 1배로 감경
10	20160874	징계부가금 3배	감경	해임, 1배로 감경
11	20160039	징계부가금 4배	취소	형사재판 무죄확정
12	20150214	징계부가금 4배	취소	원처분 사유 변경, 강등→감봉1월

출처 : 소청심사위원회, 소청사례(<https://sochung.mpm.go.kr/>)

2. 경찰공무원의 징계부가금에 대한 소청사례 현황 및 분석

분석대상 소청사례 97건 중 소청인이 경찰공무원(해양경찰 포함)으로 파악되는 것은 총 42건이다. 경찰공무원의 징계부가금 원처분은 대부분이 금품·향응수수 금액의 1배이다.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표 8〉 경찰공무원 금품수수(향응수수)에 대한 징계부가금 소청사례(배수별)

징계부가금 원처분	1배	2배	3배	4배	5배
사례 수 (비율%)	27 (64.3%)	9 (21.4%)	5 (11.9%)	1 (2.4%)	0 (0.0%)

그러나 해당 사건들의 소청결정문 내용을 분석해 보면 비위의 정도가 징계위원회의 의결과 부합하지 않는 것을 다수 찾을 수 있다. 예를 들면, ‘사건번호-20190305’의 경우 경찰관이 사건관계인의 청탁을 받고 직무관련자로부터 400만원을 수수하여 강등과 징계부가금 1배의 처분을 받았다. 알선수재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선고를 받았지만 청렴의무에 위배되는 행위로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어 소청인의 청구가 기각되었다. 또 다른 사례로 ‘사건번호-20170862’의 경우 경찰관이 피의사건에 관해 청탁을 받고 있던 중, 사건청탁자에게 향응을 수수하고 사건을 부당하게 처리한 사례로 원처분 강등과 징계부가금 1배의 처분을 받았다. 결정문의 사실관계를 검토한 결과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금품비위 금액의 4~5배)’ 또는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금품비위 금액의 3~4배)’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럴 경우 금품비위 금액의 3배~5배 사이로 징계부가금을 부과하도록 소관 징계위원회에 요구해야 한다. 그러나 원처분을 볼 때 금품비위 금액의 1배만 부과하듯 하도록 요구한 것으로 보여 진다.

〈표 9〉 경찰공무원 금품수수(향응수수)에 대한 징계부가금 소청사례(유형별)

결정유형	각하	기각	감경	취소	기타
사례 수 (비율%)	0 (0.0%)	28 (66.6%)	1 (2.4%)	13 (31.0%)	0 (0.0%)

이러한 문제점은 감사원의 경찰청 기관운영감사에서도 지적되었다. 감사원의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2016년부터 2019년 8월 말 사이에 경찰청에 설치된 중앙징계위원회와 경기남부지방경찰청 및 소속 경찰서에 설치된 보통징계위원회에서 금품 관련 비위행위자에 대한 징계 및 징계부가금 부과결을 요구한 내역을 점검한 결과, 비위의 정도와 고의·과실 여부를 적절하게 판단하지 못하고 징계부과금 부과결을 요구한 사례들이 지적되었다. 아래 <표 10>은 중앙징계위원회에 요구된 징계와 징계부가금에 대한 의결 내역이다.

〈표 10〉 중앙징계위원회 징계부가금 부과결요구 내역(2016년~2019년 8월 말)

징계 의결일	징계사유	요구 양정	요구금액 (배수)	의결 양정	의결금액 (배수)
2016.01.08.	대출 앞선 대가로 90,000,000원 수수	중징계	1배	파면	미부과
2016.11.14.	부하직원 등으로부터 차량 수리비 등 2,515,000원 상당의 금품 및 향응 수수	중징계	1배	강등	1배
2017.03.07	인사청탁, 형사사건 진행사항 확인 등의 대가로 현금4,000,000원 수수	중징계	1배	정직3월	1배
2017.04.11.	사건청탁 명목으로 89,000,000원 수수	중징계	1배	파면	미부과
2017.12.7.	인사청탁 및 사건 수사와 관련하여 35,000,000원 상당의 금품 수수	중징계	1배	해임	미부과
2017.09.13.	사건 처리를 대가로42,700,000원 상당의 금품 및 향응 수수	중징계	1배	파면	미부과
2016.12.27.	소속직원으로부터 상품권 700,000원 요구 및 수수	중징계	1배	정직3월	1배
2016.09.30.	수사 관련자로부터 청탁을 받고 현금 12,000,000원 수수	중징계	1배	파면	미부과
2017.04.11.	직무 관련 업체로부터 3,093,800원 상당의 금품향응수수	중징계	1배	강등	1배
2016.06.16.	직무 관련자로부터 사건 청탁 명목으로 502,000원 상당의 금품향응 수수	중징계	1배	정직1월	1배
2016.06.16.	직무 관련자로부터 공사수주를 도와주는 대가로 현금 5,000,000원 수수	중징계	1배	파면	미부과
2017.05.30.	직무 관련자로부터 3회에 걸쳐 금품 및 향응 9,607,000원 상당 수수	중징계	1배	파면	미부과
2016.03.23.	직무 관련자 및 부하 직원으로부터 현물1,350,000원 상당 수수	중징계	1배	해임	미부과

출처 : 감사원(2020), 『감사보고서 : 경찰청 기관운영 감사』, 77-78면 재구성

감사원에서 위의 징계사례를 분석하여 직무관련성, 금품비위 금액, 요구 여부 등을 기준으로 비위정도와 고의·과실 여부를 판단하였더니 13건 중 3건은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인정되어 최소한 3배 이상의 배수를 요구해야 하고, 나머지 10건은 비위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인정되어 4배 이상의 징계부가금 부가의결을 요구해야 하는 것으로 판단했다(감사원, 2020: 77-78).

3. 소결

징계부가금 제도는 형사처벌 되지 않고 주로 경징계 대상이 되는 소액 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 횡령 사건에서 부당이득을 환수하는 동시에 비위 정도와 고의여부에 따라 경제적 제재를 부과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러한 도입 취지는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 사례에서도 잘 나타나 있다. 배제징계 또는 형사처벌 대상인 된 경우에는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을 취소하는 결정을 하거나 부당이득 환수의 수준에서 1배~2배로 감경하는 것을 알 수 있다. 결국 과잉처벌의 문제를 피하기 위해서 비위의 정도가 심한 징계사유에서는 이미 중징계의 징계처분과 형사처벌로 부과되는 재산형을 통해 불법적 이익의 환수나 경제적 처벌 기능이 달성되어 징계부가금 제도 자체가 형해화(形骸化)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또한, 징계의결 요구권자가 정수의 배수로 징계부가금 부과의를 요구하고 있지만, 부과기준과 부합하지 않는 자의적인 부과의를 요구를 하고 있어 징계부가금 제도의 도입 취지가 훼손되고 있다. 만일, 징계권자가 대상자의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부과기준 보다 낮은 수준의 징계부가금 부과의를 하였다면 징계위원회의 권한을 침해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IV. 결론 : 입법·정책적 개선방안

경찰공무원의 공직부패 예방을 위해 징계처분, 징계부가금, 사안에 따라 형사처벌을 통한 신체형 및 재산형(벌금, 몰수, 추징), 비위유형에 따라 퇴직급여와 퇴직수당의 감액지급 등 과도할 정도의 백화점식 제재가 마련되어 있다. 그러나 공직부패를 위한 법제도적 장치는 책임에 상응하는 적절한 제재여야 하고 무엇보다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제도 설계로 처벌의 근접성과 확실성을 확보해야 한다. 이를 위해 현행 경찰공무원 징계부가금 제도의 입법·정책적 개선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안한다.

1. 입법적 개선방안

위에서 검토한 바와 같이, 징계부가금 부과 대상 징계사유가 형사처벌 대상이 되느냐는 징계위원회에서 징계부가금 부과를 의결할 때와 소청심사위원회에서 원처분인 징계부가금

에 대한 결정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 경찰공무원의 직무관련 범죄에 대한 고발은 소속 기관의 장이 결정한다. 소속 기관의 장은 「형사소송법」 제234조 제2항과 「공무원의 직무관련 범죄 고발 지침(국무총리)」에 의하여 범죄행위의 경중과 고의·과실여부를 고려하여 고발 여부를 결정한다. 단, 아래 <표 1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더욱 엄정히 처리해야 한다.

<표 11> 경찰공무원 직무고발 결정시 엄정처리 사유

1. 뇌물수수, 공금횡령, 배임 등 직무에 관한 부당한 이득 또는 재물취득과 관련된 범죄에 해당되는 경우
2. 부당한 행정행위를 수반한 범죄에 해당하는 경우
3. 범죄내용이 파급개연성이 크고 수사시 비위 규모가 더 밝혀질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4. 징계처분을 받고 징계기록말소기간 이내에 다시 범죄에 해당하는 비위를 행한 경우
5. 기관특성상 비위발생 빈도가 높아 각 기관별로 특별히 지정한 범죄에 해당하는 경우
6. 기타 범죄의 횡수, 수법 등을 고려할 때 고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출처 : 「공무원의 직무관련 범죄 고발 지침(국무총리훈령)」 제3조 '나'항

징계부가금 부과 대상 징계사유는 뇌물죄나 업무상 횡령, 배임 등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경우가 많다. 비위 정도(금액, 고의·과실 여부)에 따라 징계처분으로만 그칠 것인지 직무고발을 할 것인지 소속 기관의 장의 재량에 속하지만 재량의 한계가 필요하다. 그리고 직무고발 여부는 징계위원회에서 징계와 징계부가금 부과를 의결할 때 중요한 고려사항이 된다. 특히, 앞서 검토한 바와 같이 징계부가금의 배수(1배~5배)가 형사처벌 대상 여부에 따라 상당히 달라지는 점을 고려하면 직무고발의 세부적인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 현행 법령 상 국무총리 훈령으로 직무고발 지침이 만들어져 있지만 일반적인 기준에 불과하여 행정기관 별로 보다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금품수수 등 금액, 고의 및 과실의 정도를 기준으로 경찰청훈령으로 고발지침을 마련해야 한다. 아래 <표 12>는 소방공무원과 해양경찰공무원에 대한 직무고발의 지침 사례이다.

<표 12> 특정직(소방, 해양경찰) 공무원 필요적 직무고발 지침 사례

신분	근거법령	사유
소방 공무원	「소방공무원의 직무관련 범죄 고발지침 (소방청훈령)」	1. 200만원 이상 금품·향응 수수, 공금횡령·유용(공소시효 내 누계금액을 말함) 2. 200만원 미만이라도 공금횡령·유용 금액을 전액 회복하지 않은 경우 3. 최근 3년 이내 금품향응 수수, 공금횡령·유용, 업무상 배임으로 징계를 받은 자가 또다시 수수 등을 한 경우 4. 인사, 계약 등 직무수행 과정에서 서류를 위조·변조하거나 은폐한 경우
해양 경찰 공무원	「해양경찰청 공무원의 직무관련 범죄 고발 규칙 (해양경찰청훈령)」	1. 1회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향응 수수, 공금 횡령·유용 등을 한 경우 2. 1회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 300만원 미만이라도 공금횡령·유용 금액을 전액 회복하지 않은 경우 3. 최근 3년 이내 금품향응 수수, 공금횡령·유용, 업무상 배임으로 징계를 받은 자가 또다시 수수 등을 한 경우 4. 인사, 계약 등의 직무수행 과정에서 서류를 위조·변조하거나 은폐한 경우

출처 : 「소방공무원의 직무관련 범죄 고발지침」 제4조 제2항 및 「해양경찰청 공무원의 직무관련 범죄 고발 규칙」 제4조 제2항

2. 정책적 개선방안

다음으로, 제도 운영상의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위에서 문제점으로 제기했던 바와 같이 징계부가금의 부과 의결을 요구할 때 정수 배수(예를 들면, 1배, 3배)로 요구하고 있고, 징계부가금 부과기준에 벗어난 제 식구 감싸기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 문제는 감사원이 경찰청 기관운영 감사에서도 공식적으로 지적한 사항이다. 물론, 징계권자의 징계나 징계부가금 의결 요구가 적정하지 않을 경우 징계위원회에서 이에 기속되지 않고 달리 정할 수 있지만 분석 대상 소청사례에서는 찾아 볼 수 없었고, 일반적으로 매우 이례적인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리고 징계부가금 부과와 관련된 법령의 규정을 종합해 보면 징계권자는 징계 사유가 징계부가금 부과 대상 사유에 해당이 되면 필요적으로 징계위원회에 징계부가금 의결을 요구해야 한다. 그러나 의결 요구를 받은 관할 징계위원회는 이론상으로는 징계부가금 의결 요구에 대해 부과 기준에 따라 부과를 할 수도 있고, 기준을 따르지 않고 5배 이내에서 부과 금액을 정할 수 있는 재량이 있다. 즉, 징계부가금 의결 요구에도 불구하고 징계부가금을 부과하지 않는 의결을 할 수도 있다. 따라서 징계부가금 의결 요구가 있는 사건들에 대해서 징계위원회마다 징계부가금의 의결 여부, 부과 기준이 달라질 수 있다.

결론적으로 징계부가금의 경우 징계권자가 어떤 배수로 징계부가금을 요구하는지, 징계위원회에서 어떤 기준으로 조정, 감면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이로 인해 징계부가금 부과 대상자들에게 형평성의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또한, 징계부과금이라는 징계벌 하나만 놓고 보면 비위행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사람들은 징계부가금을 면제 받거나 1~2배의 부과 처분을 받게 되고, 경미한 비위에 대해서는 3~5배의 부과를 받는 근본적인 모순이 발생하게 된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첫째, 징계권자의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 요구시 배수를 특정하여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징계부가금 부과 대상에 해당할 경우 부과 의결을 요구하도록 해야 한다. 이후 징계위원회에서 비위행위의 정도와 고의·과실 여부를 고려하여 법령에 따른 징계부가금 부과 기준의 급간을 정하고, 조정 및 감면 사유에 대해 검토한 후 최종적으로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을 해야 한다. 이를 위해 현행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부과 기준을 바탕으로 금품수수 등 금액, 고의 및 과실의 정도, 환수여부 등 다양한 요소들을 고려한 세적인 부과 기준을 경찰청 훈령으로 제정할 것을 제안한다.

둘째,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징계부가금 제도의 도입 취지와 징계부가금 부과로 달성하려는 징벌의 효과를 고려하여 형사처벌 대상 또는 배제징계로 퇴직급여와 퇴직수당 제한에 해당하는 경우 징계부가금 대상에서 제외할 필요가 있다. 물론, 이 과정에서 징계부가금이 유일한 경제적 제재라고 한다면 예외적으로 불법적 이익에 대한 환수를 위해 부과 의결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도 보완책이 될 수 있다. 실질적으로 이런 사안의 경우 징

계부가금 제도 운영에서 대부분 부과 의결이 취소되고 있고, 과잉 처벌의 논란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소청심사위원회 결정에서 일관되게 판단하고 있는 ‘불법적 이익의 환수나 경제적 처벌의 기능’이 형사처벌이나 자진 환수 등으로 이미 달성될 수 있다면 징계위원회에서의 징계부가금 의결은 행정력 낭비만 초래 할 뿐이다. 영성한 제도 설계의 문제를 사후에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으로 ‘침해의 최소화성의 원칙’과 ‘법익 균형성의 원칙’에 부합하도록 재조정하는 것은 행정력 낭비 뿐만 아니라 당사자에 대한 또다른 인권침해가 될 수 있다.

참고문헌

- 경찰청 정보공개 청구 자료(2021-05-13 정보공개)
- 김유환. (2016). 『현대행정법강의』. 법문사.
- 김지영. (2017). “행정법상 부가금에 관한 고찰: 징계부가금과 제재부가금을 중심으로”. 법과정책연구 17권 3호, 316-323면.
- 법제사법위원회.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검토보고.
- 오준근. (1999). “행정제재금에 관한 비판적 고찰”. 공법연구 제27권 제2호, 411-425면.
- 인사혁신처. (2018). 『2019년도 징계업무편람』.
- 장호진. (2017). “지방공기업법상의 징계부가금 및 징계시효 제도에 관한 고찰”. 법학논총 34권 1호, 411-436면.
- 최정윤(2018). “공무원의 재정상 행위와 그 의무위반에 관한 공법적 소고”. 한양법학 29권 1호, 223-248면.
- 최정윤·김형섭. (2021). “공무원의 행정법상 책임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 법과정책연구 21권 1호, 201-234면.
- 행정안전부, 2010년 3월 18일 보도자료)
- 대법원 1999. 11. 26. 선고 98두6951 판결.
- 대법원 1992. 9. 26. 선고 91누11308 판결.
- 대법원 2000. 1. 21. 선고 99도4940 판결
- 헌재 2004. 9. 23. 2004헌가12.
- 헌재 2015. 2. 26. 2012헌바435.
- 『경찰공무원법』
- 『공무원연금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1537호, 2021. 3. 16)
- 『국가공무원법』(법률 제18237호, 2021. 6. 8)
- 『공무원 징계령』(대통령령 제30878호, 2020. 7. 28)
-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총리령 제1663호, 2020. 12. 31)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법률 제13278호, 2015. 3. 27., 제정)

투고일자 : 2021. 09. 07

수정일자 : 2021. 09. 14

게재일자 : 2021. 09. 30

<국문초록>

공직부패 방지를 위한 경찰공무원 징계부가금 제도에 관한 연구

김 영 식

본 연구는 ‘징계부가금’ 제도에 대한 운영 실태를 분석하고 문제점을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징계부가금에 관한 이론적 검토를 하고 소청심사위원회에 청구된 징계부가금 소청청구 사례를 실증적으로 분석하여 문제점을 도출하고, 공직부패 예방을 위한 입법·정책적 개선방안을 제시한다.

징계사유가 형사처벌 대상이 되느냐는 징계위원회에서 징계부가금 부과를 의결할 때 그리고 소청심사위원회에서 원처분인 징계부가금에 대한 결정을 함에 있어 중요한 고려 사항이다. 따라서 비위 정도에 따라 징계처분으로만 그칠 것인지 직무고발을 할 것인지 소속 기관의 장의 재량에 속하므로 재량의 한계로서 직무고발의 세부적인 가이드라인이 필요하고, 국무총리 훈령인 직무고발 지침을 기준으로 행정기관별로 보다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할 필요가 있다.

제도 운영상으로는, 징계부가금 부과 대상자들에게 형평성의 문제와 제도 운영상의 모순을 해소하기 위해서 징계권자가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 요구시 배수를 특정하여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징계부가금 부과 대상에 해당할 경우 부과 의결만을 요구해야 한다. 다음 단계로, 징계위원회에서 비위행위의 정도와 고의·과실 여부를 고려하여 법령에 따른 징계부가금 부과 기준의 급간을 정하고, 조정 및 감면 사유에 대해 검토한 후 최종적으로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을 해야 한다. 또한, 징계부가금 제도의 도입 취지와 징계부가금 부과로 달성하려는 징벌의 효과를 고려하여 형사처벌 대상 또는 배제징계로 퇴직급여와 퇴직수당 제한에 해당하는 경우 징계부가금 대상에서 제외할 필요가 있다.

주제어: 징계부가금, 경찰공무원, 직무고발, 금품수수, 공직부패

